

'22. 12. 15.(목) 14:00

영 상 회 의

# 제14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(임시회) 회 의 자 료

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



# 목 차

I . 개 요 .....	1
---------------	---

II . 회의안건 .....	3
-----------------	---

① 자치경찰위원회 파견경찰관 파견연장 건 .....	4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② 자치경찰 제도개선 관련 동향 .....	7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③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위한 공동건의(안) .....	12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III . 위원회별 주요 사업동향 .....	19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① (인천) '22년도 인천 자치경찰위원회 청렴시책 추진사항...	20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② (대전) 자살예방 담당자 간담회 개최 .....	23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③ (충북) 권역별 찾아가는 정책 포럼 개최 .....	25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④ (제주) 제주도-경찰청-경찰병원 업무협약 체결 .....	27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

# 제14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(임시회) 개요

## □ 회의개요

- 일시 / 장소 : '22. 12. 15.(목) 14:00~15:30 / [영상회의\(ZOOM\)](#)
- 참석 대상 :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18명
- 주요 내용 : 자치경찰제 주요 현안 논의
- 시간 계획

시 간	내 용	비고
14:00~14:05 5'	○ 모두발언(서울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)	
14:05~15:25 70'	○ 안건토의	
15:25~15:30 5'	○ 마무리말(서울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)	

## □ 회의안건

- ① 자치경찰위원회 파견경찰관 근무기간 연장 건
- ② 자치경찰 제도개선 관련 정부 동향
  - ‘자치경찰 분과위원회’ 회의참석(11.21.) 및 건의
  - 경찰청 ‘경찰대혁신 태스크포스(TF)’ 구성·운영
- ③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위한 공동건의(안)

## □ 위원회별 주요사업 동향

- ① (인천) '22년도 인천 자치경찰위원회 청렴시책 추진사항
- ② (대전) 자살예방 담당자 간담회 개최
- ③ (충북) 권역별 찾아가는 정책 포럼 개최
- ④ (제주) 제주도-경찰청-경찰병원 업무협약 체결



## 회의안건

## 1

## 자치경찰위원회 파견경찰관 파견연장 건

## □ 그간 경과

- '22.8월 정기인사 시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파견경찰관 중 자연감소 인력인 18명 감축(경찰청·인사처), 총리 산하 '경찰제도발전위원회'의 파견경찰관 인력·기간 관련 논의결과를 존중하여 인력 운용방향 결정
  - 현재 총 167명(정원 51, 정원 외 116) 경찰관 파견 중('22.9.~'23.1.)

구분 (세종 제외)	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경기 南	경기 北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기존인원	185	22	13	10	14	11	8	10	12	10	9	11	13	10	8	8	9	7
자경위 案*	-19	-4	-2	-1	-2	-2	·	-1	-1	-1	·	-2	-2	-1	·	·	·	·
복귀('22.8)	-18	-4	-2	·	·	·	-2	-1	·	-2	·	-1	-2	·	·	-1	-2	-1
현원('22.9)	167	18	11	10	14	11	6	9	12	8	9	10	11	10	8	7**	7	6

\* <'22.7.26. 인사처에 통보한 案> (1인) 현원 유지, (2인) '23.1. 정원 외 파견인원의 25% 이내(최대 19명) 감축, 이후 파견 유지

\*\* 경북 2명 추가 복귀해 실제 5명(정원 2, 정원 외 3) 근무 중 / 정무직(34명) · 일반직(354명, 정원 365명) 별도

- '22.9.27.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 자치경찰 분과위원회(위원장 김선택) 구성 이후, 파견경찰관 인력 확보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으나, 기관 간 입장이 대립, 합의 결과 도출하지 못함(11.21. 2차 분과 회의)

#### <자치경찰 분과위원회 2차 회의('22.11.21.) 시>

- ▶ 분과위원장·민간위원 : 자치경찰권 강화가 현 정부 국정과제이고, 이원화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에 논의 중에는 파견 감축없이 현행 유지해줄 것을 행안부·인사처에 권고
- ▶ 경찰청(자치경찰담당관) : 한정된 기간만이라도 경찰관 배치 필요, 한시정원 희망
- ▶ 행안부(사회조직과장) : 정부의 조직 및 인원을 자문기구가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, 제도 시행 이후 사정 변화 없어 경찰관 정원 증원 불가, 경찰청의 한시정원 요구도 근거 부족
- ▶ 인사처(심사임용과장) : 대규모 파견인력 계속 운용 부적절, 증원을 통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필요,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일시에 파견 해제는 어렵겠지만 단계적 축소방안 필요



## □ 경찰청 및 인사혁신처 의견

- (경찰제도발전위원회) 파견경찰관 관련 안건을 직접 상정하지 않고, 관계기관 협의 완료 후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(12월말)
- (경찰청) 파견 만료기간('23.1.) 고려 시 인사처 협의 통한 기간 연장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, 인사처는 감축안 제시 시 가능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인만큼 과감한 자구노력이 담긴 감축안을 자경위가 제시해주기를 요청(12.16.限)

※ 원활한 파견자 선발·유지 위해 파견기간은 1년 단위 연장토록 인사처와 잠정 합의

경찰청 예시안	1안	· '23.1. 現 정원 외 116명 모두 1년 단위 연장하되 '24.1. 일괄 복귀
	2안	· '26.1.까지 단계적으로 정원 외 파견 규모 감축 ※ ('23.1.) 정원 외 99명(17명 감축) → ('24.1.) 70여명 잔류 → ('25.1.) 35여명 잔류 → ('26.1.) 전원 감축

- (인사처) 경찰청 예시 1안 수용 의견이되, 예시 2안 관련 '23.1. 정원 외 90명 (26명 감축) 이하로 감축 및 '25.1. 정원 외 전원 복귀 시 수용 가능 의견(12.8.)

## ※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

경찰청 예시안	1안	· '23.1. 現 정원 외 116명 모두 1년 단위 연장하되 '24.1. 일괄 복귀
	2안	· '26.1.까지 단계적으로 정원 외 파견 규모 감축 ※ ('23.1.) 정원 외 99명(17명 감축) → ('24.1.) 70여명 잔류 → ('25.1.) 35여명 잔류 → ('26.1.) 전원 감축
인사처 제시안	3안	· ('23.1.) 정원 외 90명(26명 감축) → ('24.1.) 추가 감축 → ('25.1.) 전원 감축

구분	주요내용
00시도	<p>① 경찰청과 인사처가 제시한 감축안 중 부득이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감축안을 선택할 것인지 ⇒ (경찰청 예시 1안 및 2안, 인사처 제시안에 대해 선호도 순으로 기재바랍니다.)</p>
	<p>② 파견인력 연장 방안 및 향후 대응방안 ⇒ (경찰청 및 인사처 등에 제시할 방안이 있는 경우 자세히 기재해주시기 바라며, 향후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대응방안도 기재바랍니다.)</p>
	<p>③ 만약 특정인원(예. 17명 또는 26명)을 감축해야 하는 경우 세부 감축방식 ⇒ ('23.1. 위원회별 감축인원을 어떤 방식으로 배정해야 하는지 제안해주시기 바라며, 더불어 '24.1 이후 감축규모 및 방안에 대해서도 기재바랍니다.)</p>
	<p>④ 파견자 복귀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자체 대응방안 ⇒ (예. 경찰관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, 시도 일반직 정원을 증원, 또는 시도 경찰청 정원을 이체하는 등 실제 검토·추진 중인 방안이 있으면 기재바랍니다.)</p>

## □ ‘자치경찰 분과위원회’(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) 회의참석(11.21)

- 참 석 자 : 자치경찰 분과위원(6인),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장,  
 행안부 사회조직과장, **서울 자치경찰위원회**

## ○ 주요 논의사항 및 내용

## ① 지구대·파출소 등 지역경찰 관리기능 변경 방안 관련

구분	주요 의견
서울 자경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역주민과 밀착된 지구대·파출소가 국가경찰(112상황실) 소관으로, 지역치안 수요에 맞는 적극적 대응 및 지휘 불가</li> <li>- 국가경찰 소관으로 이관되어, 지구대·파출소가 단순한 112 신고 출동 기관으로 전락하여 지역안전에 소홀해졌다는 비판 존재</li> <li>- 이원화 자치경찰제 전, 과도기적 단계로라도 지구대·파출소 관리 기능 환원 필요</li> <li>- 단, 이관 시에도 인사업무량 폭증(인사대상 10,000여명 증가) 및 책임문제 확대에 따른 대응 필요</li> </ul>
경찰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구대·파출소는 국가경찰/자치경찰사무 모두를 수행하는 종합 경찰 행정 기관으로, 기존부터 직제 상 경찰서장 직속임</li> <li>- 자치경찰로 환원하더라도 현행 제도 상 크게 개선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</li> </ul>
향후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재 해당사항이 ‘경찰 대혁신 TF’ 에서 논의 중으로, 이르면 연내 환원여부 등 결정</li> </ul>

## ② 시·도자경위 근무 경찰관 인력 확보방안

구분	주요 의견
서울 자경위, 경찰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국 자경위에 경찰정원을 각 3명만 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</li> <li>- 정원이 아닌 추가파견 형태는 근무가 불안정하고 연속적 행정업무 추진에 부합하지 않음</li> <li>- 우선 파견경찰관 파견을 연장해주시고, 급한대로 한시 정원을 두어서라도 경찰관 인력유지 필요</li> </ul>
행정안전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원을 결정하는 것은 정책적 사항이 아닌 국가 전체 운영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</li> <li>- 제도 변화가 없는데도 정원을 증가하는 것은 불가함</li> </ul>

구분	주요 의견
인사혁신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미 17개 시도에 113명의 경찰이 추가로 파견되어 있는데, 전국 비별도 파견 공무원의 50%에 달하는 숫자임</li> <li>- 타 부처·기관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고 규모가 너무 커, 점진 축소 등 기관별 노력 선행 필요</li> </ul>
분과위원장 (김선택 교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치경찰권 강화는 국정과제로서, 제도개선 전 위원회 경찰인력 복귀 등 인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어불성설</li> <li>- 행안부, 인사처가 국정과제임을 고려하여 정원확보 및 파견 연장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람</li> </ul>

### ③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관련 자치경찰제도 개선방안

구분	주요 의견
분과위원장 (김선택 교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중운집행사 관련 법령 규정 및 조례 등 관계규정이 매우 모호하여 개선 필요</li> <li>-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지휘체계의 잘못인지, 112 대응의 잘못인지 확인 필요</li> </ul>
서울 자경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경위 소관업무는 ‘다중운집행사 지원’으로, 다중운집행사 전반과 관련하여 혼잡교통 대책 마련 및 대응을 의결한 바 있음(’22.6월)</li> <li>- 이태원 행사는 서울경찰청에서 국가경찰 소관사항으로 대응</li> </ul>
경찰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수본 수사를 통해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밝혀질 것</li> <li>- 현재까지 파악 결과, 112 신고접수에 따른 지령 전달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</li> </ul>

## □ 경찰청 ‘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(TF)’ 구성·운영

- (추진배경)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경찰조직 쇄신 및 매뉴얼 정비
- (TF 위원) 공동 위원장(이창원 한성대 총장, 조현배 전 해경청장) / 경찰청 국장 전원
  - ※ 민간자문단 운영 : 경찰행정학도시공학소방안전 등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참여
- (역할) 공동 위원장 주관으로 매주 1회 TF 위원(내·외부), 현장 경찰자문단 등이 참여하는 전체 회의를 개최해 혁신과제들을 집중 토의

○ (팀구성) **3개 분야** (인파관리 개선팀 / 상황관리·보고체계 쇄신팀 / 조직문화 혁신·업무역량 강화팀)

① **인파관리 개선팀** :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상황 등 경찰 안전관리 매뉴얼 정비

- 다중운집·재난 등 위험성을 예측·판단하는 기준 정립
- 인공지능·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밀집도에 따라 위험경보 체계 구축, 인파 규모에 따라 단계별 질서유지 방안 수립 등

② **상황관리·보고체계 쇄신팀** : 지휘역량 강화, 신속보고체계 정비, 조기경보체계 도입

- 112 신고 이후부터 출동과 대응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살피고 현장 대응력 강화
- 반복적인 신고를 분석해 위험 징후를 판단하는 조기 경보체계 도입
- 112·119 상황전파 유관기관 공동대응 등 공조체계 구축

③ **조직문화 혁신·업무역량 강화팀** : 경찰관의 사명감과 책임감 제고

- 직무·역량기반 교육, 관리자 자격 심사제 도입 등 교육훈련 개혁 추진
- 재난상황 등 특수 전문분야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 및 육성
- 경찰관서별 실무밀착형 직장교육 체계 구축, 유형별 상황관리·지휘훈련 일상화

○ (회의개최) 총 4회 개최

구분	일 시	장소	주요 내용
1차	'22.11.18. (금)	경찰청 대청마루 (13F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고 발생 우려시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유형별·단계별 인파 관리 요령 등 인파사고 예방 매뉴얼 제작</li> <li>○ 112상황실장이 직접 지휘·운용할 수 있는 기동대 가동 등</li> </ul>
2차	'22.11.24. (목) 10:00	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긴급상황 보고체계 개선</li> <li>○ 다중운집 위험상황에서의 현장 조치 역량 강화</li> <li>○ 자치경찰제</li> <li>○ 지역경찰 조직 개편 과제 등</li> </ul>
3차	'22.12.1. (목) 10:00	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각 팀에서 추진 중인 개혁과제 진행 상황 점검</li> <li>○ 역량·업무 중심 인적자원 관리방안</li> <li>○ 치안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능·경력별 역량 기반 교육체계 구축</li> <li>○ 다중운집 상황 관계기관(지자체·경찰·소방 등) 간 협업 강화 방안</li> </ul>
4차	'22.12.8. (목) 10:00	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일선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한 ‘(가칭)112 기본법’ 제정 방안</li> <li>○ 전문 민간경비업 육성 등 다중운집 행사 시 질서 유지를 위한 민·경 협력 방안(경비업법 개정)</li> <li>○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경찰 체계 개편 방안</li> </ul>

○ 건의배경

- 자치경찰사무에 ‘재난대응’, ‘다중운집행사 지원’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, 권한부족 등으로 역할 수행 곤란 및 제도 취지 달성 어려움

**※ 법령상 자치경찰사무 중 재난상황 등 관련 규정**

**<경찰법> ‘안전사고 및 재해·재난 시 긴급구조지원’**

- <대통령령> 1)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
- 2)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
- 3)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

**<경찰법> ‘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’**

- <대통령령> 1)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
- 2)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

**※ 자치경찰제 관련 권한부족 등 문제점**

- ▶ (지역경찰)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구대·파출소가 자치경찰제 법령개정 시 국가경찰 소속으로 변경되어, 사·도에서 관여할 수 없고 기존보다 지구대·파출소 협업이 더 어려워진 상황
- ▶ (인사권 형식화) 사·도에 경찰 승진임용권을 부여하였으나 승진심사권한은 없어 형식에 불과
- ▶ (사무국 경찰) 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회 사무국에 경찰정원이 3명에 불과하여, 정원 외로 경찰관을 파견받아 운영 중(+15명) (모든 사·도 파견운영 중, 파견기간 6개월)

○ (단기) 지구대·파출소 소관 환원 등 현행법령 내 개선

- 대시민 비상상황 대응을 중점 추진하는 지구대·파출소의 자치경찰화 건의
  - ▶ 현재 자치경찰 소관 환원에 대해 정부논의 중으로, 지역경찰 협력 강화 및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교두보 확보를 위하여 자치경찰로 소속전환 건의
  - ▶ 단, 자치경찰로 지구대·파출소 환원 시 책임문제 확대에 따른 지휘규정 등 정비 추진

- (중기) 「경찰법」 등에 자치경찰 관련 정보공유 의무 명시, 지휘 실질화
  - － 자경위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공유 의무조항 부재('19년 자치경찰 법안에는 존재)
  - － 「경찰법」 상 정보공유 의무를 명시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보공유 대상 목록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지휘·의결이 가능토록 제도개선
- (장기) 시민안전 강화를 위한 '이원화 자치경찰제' 신속 시행 적극건의
  - － 현행 일원화 제도 하에서는 자경위의 비상상황 대응에 근본적 한계 존재
  - － 지자체 책임 하에 치안행정과의 융합으로 비상대응을 강화하도록 이원화 건의

※ 국무총리 소속 '경찰제도발전위원회'와 소통 및 건의 중으로, 해당 위원회 결정안으로 이원화 법률개정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위원회 설득건의 우선추진

## □ 건의배경

- 이태원 참사로 자치경찰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다수 등장함에 따라 현 자치경찰의 제도적 한계와 자치경찰 실질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 확산 필요

- ◇ 도입부터 우려 ... 이태원 참사에 얻어맞는 '존재감 0' 자치경찰 (중앙일보)
- ◇ 이태원 참사에 무력했던 자치경찰 ... "손발없는 반쪽짜리" (YTN) 등

- 제13차 회의('22.11.11.) 시 언론보도 제안

- 자치경찰 제도개선 정책컨퍼런스('22.11.11.) 주요 내용과 그 간 협의회 차원에서 지적해왔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언론 보도 계획

## □ 주요 내용

- 사무국 파견경찰관 현원 유지 및 현원 정원화
- 지구대·파출소의 소속 직제 환원
-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 내실화
- 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 등 안정적인 자치경찰제 재원 마련
- '지방자치법'에 자치경찰사무 규정 및 '지방자치경찰법' 별도 제정

## □ 추진방안

- (1안) 언론 보도
- (2안)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국회, 행안부,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한정하여 건의



- 2022년 10월 29일, 전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안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먼저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.

이번 사회적 대참사에 대해 국민의 신체·생명을 보호하는 경찰은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에 문제와 한계를 드러냈으며, 자치경찰위원회 또한 재난 대응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.

자치경찰위원회는 ‘반쪽짜리 자치경찰’ 또는 ‘무늬만 자치경찰’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, 현 자치경찰제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.

이에 단기적으로는 현행 ‘자치경찰 일원화 모델’을 개선하고, 궁극적으로 ‘자치경찰 이원화’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부 및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한다.

- 첫째,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파견된 경찰관 현원을 유지하고, 각 시·도 치안수요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배정된 경찰정원(3명)을 파견경찰관 현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.
  - 자치경찰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는 정원 외 경찰관\*의 파견종료가 '23. 1. 31.임에도 불구하고, 현재까지 이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여 위원회별 업무공백 발생이 우려된다.

(\* 현재 전국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원은 총 51명이고, 정원 외 파견경찰관 116명이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에 파견 근무중)

-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치안정책 추진을 위해 경찰 인력은 필수적이므로, 정원 증원시까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·도 경찰청 간 협의하여 처리하고,

- 중장기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관 정원을 현실화해줄 것을 촉구한다.

○ 둘째, 기존 생활안전과에서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된 지구대·파출소의 관리운영 부서를 다시 ‘생활안전과’로 환원하여야 한다.

- 2020.12.31. 「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규정(대통령령)이 개정되어 지구대·파출소의 관리 운영 부서가 종전 ‘생활안전과’에서 ‘112치안종합상황실’로 변경되었다.
- 112치안종합상황실의 관리를 받는 지구대·파출소 경찰관들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집중할 뿐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순찰 등을 수행해야 하는 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.
- 그로 인한 범죄예방의 공백과 피해는 결국 국민에 돌아가기 때문에, 지구대·파출소의 관리운영 부서를 종전과 같이 ‘생활안전과’로 환원할 것을 건의한다.

○ 셋째,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임용권을 실질화해야 한다.

-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은 경찰기관(경찰청, 시도 경찰청, 경찰서 등)에 설치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, 자치경찰위원회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2명에 대한 추천권한만 가져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는 승진이 결정된 대상자에 대한 형식적인 임용권한만 행사 중이다.
- 또한, 현재 관련 법령(「경찰공무원 징계령」 제3조) 상 보통징계위원회를

경찰기관(경찰청, 시도경찰청, 경찰서 등)에만 둘 수 있어, 자치경찰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심사를 할 수 없고, 국가경찰의 징계심사 결과에 대해 형식적인 승인·의결권만 수행하는 등 한계가 있다.

- 따라서 ‘보통승진심사위원회’ 및 ‘보통징계위원회’를 자치경찰위원회에 설치할 수 있도록 「경찰공무원법」(제17조) 및 「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(대통령령)」, 「경찰공무원 징계령(대통령령)」의 개정을 촉구한다.

○ 넷째, 교통 과태료·범칙금 재원의 일부를 시·도에 이관하고, ‘자치경찰교부세’ 및 ‘자치경찰 특별회계’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자치경찰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.

- 자치경찰사무의 인력, 장비 등 소요비용 일체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(「경찰법」 제34조)하고 있으나, 일부 국비지원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자치경찰 재원은 부족한 실정이다.
- 안정적인 자치경찰 재원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 있는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의 일부를 자치경찰 재원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.
- 중장기적으로 ‘자치경찰 재원 및 시도 자치경찰특별회계’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‘자치경찰 특별교부세’ 방식으로 재원을 재배분할 것을 건의한다.

○ 다섯째, 「지방자치법」에 자치경찰사무를 명시하고,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위한 「지방자치경찰법」을 제정해야 한다.

- 현행 지방자치법에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‘자치사무’를 열거하고 있으나, 자치경찰 관련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‘자치경찰사무의 법적 성격’에 대해 자치사무인지, 위임사무(기관위임 또는 단체위임)인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.
  - 또한 현 「경찰법」상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의 개념과 기능 등 자치경찰의 기본이 되는 규정이 미흡하고, ‘국가경찰’ 중심 치안체계의 일부로서만 규정되는 문제점이 있다.
  - 따라서, 「지방자치법」에 자치경찰사무를 명확히하고, 독자적인 ‘지방자치경찰법’을 제정하여 자치경찰 실질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촉구한다.
-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는 ‘국가경찰-자치경찰 이원화’와 ‘자치경찰권 강화’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‘지역 주민 중심 자치경찰제’가 전국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.

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 
위원장 **정 용 환**

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 
위원장 **설 용 숙**

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 
위원장 **이 병 록**

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 
위원장 **김 태 봉**

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 
위원장 **강 영 욱**

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 
위원장 **김 태 근**

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 
위원장 **나 승 권**

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 
위원장 **김 덕 섭**

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 
위원장 **신 현 기**

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 
위원장 **송 승 철**

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 
위원장 **남 기 현**

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 
위원장 **권 희 태**

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 
위원장 **이 형 규**

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 
위원장 **조 만 형**

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 
위원장 **이 순 동**

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 
위원장 **김 현 태**

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 
위원장 **김 용 구**

2022년 12월 15일

##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

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  
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장

**김 학 배**



제14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임시회

## 위원회별 주요사업 동향

**□ 2022년 자치경찰 맞춤형 청렴 기본계획('22.3월 수립)**

- (목표) ‘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천자치경찰’ 구현
- (시책) 인천자치경찰 청렴도 향상을 위한 3대 시책 추진
  - ① 청렴인식의 정립 : 자치경찰 맞춤형 청렴교육의 시행(유튜브/ 2회) 및 웹툰 등을 활용한 청렴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전파
  - ② 청렴문화의 확산 : 인천자치경찰 대상 청렴 슬로건 공모 및 전파, 청렴시책의 위원회 누리집 홍보를 통한 청렴 공감대 구축
  - ③ 엄정한 공직문화 확립 :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시행(반기별/ 5개 관서), 교통분야 특정감사 시행(연말)

**□ 청렴시책 주요 추진사항**

- 인천자치경찰 청렴교육 콘텐츠(웹툰) 제작
  - 제작기간 : 2022. 9 ~ 10월 / (대본은 8월에 자체 제작)
  - 제작방법 : 웹툰 등 디자인 업체 선정하여 자체 제작 대본에 따른 그림 표현
  - 주요내용 : ‘청탁금지법’에 따른 주요 금지행위를 경찰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설명

[청탁금지법 주요 금지행위 설명내용 (총 7회)]

**1. 부정청탁의 금지**

- 인사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은 금지됩니다.
- 행정지도·단속·감사 결과 조작·묵인 관련 부정청탁은 금지됩니다.

**2. 금품등의 수수 금지**

- 작은 선물이라도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곤란합니다.
-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상품권도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.
- 자칫 소홀하기 쉬운 사소한 물건도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곤란합니다.
- 직무관련자에게는 사교·의례 목적의 축의금이라도 신중하셔야 합니다.
-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기프트콘도 받으시면 안 됩니다.

- 활용사항 : 경찰포털과 위원회 누리집에 주1회 연재 중(11~12월)

※ [붙임] 쉽고 재미있게 보는 청탁금지법(1회) 참조



## ○ 인천자치경찰 온라인 청렴/인권 교육

- 교육시기 : 2022. 5월(청렴교육), 9월(인권교육)
- 교육방식 : 온라인 유튜브 활용
  - ※ 접속이 편하고 실시간 채팅창으로 질의, 응답이 가능한 유튜브 활용
- 교육강사 : 외부 전문강사 채용
- 교육참여 : 117명(청렴교육), 104명(인권교육)
- 상시학습 : 90분 인정(인천경찰청과 사전 협의)



## ○ 인천자치경찰 청렴슬로건 공모

- 공모기간 : 2022.7.4.(월) ~ 7.15.(금)
- 참여대상 : 관내 자치경찰 및 위원회 사무국 직원 등
- 공모결과 : 총 171건 접수
- 심사사항 : 사무국 심사(1~2차)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우수(1건, 시장상), 우수(1건, 시장상), 장려(3건, 위원장상) 선정
- 최우수작 : “실천하는 청렴문화, 신뢰받는 자치경찰”
- 활용사항 : 경찰포털 등 홍보, 청렴교육자료(웹툰) 제작시 활용

쉽고 재미있게 보는 청탁금지법



1. 부정청탁의 금지 / ① 인사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은 금지됩니다



※ 본 작품은 창작물이며 금지행위별 법령 등의 실제적, 구체적 적용과 해석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소관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.

제5조(부정청탁의 금지)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.

3. 모집·선발·채용·승진·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
13.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·단속·감사·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·단체·법인이 선정·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·단속·감사·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

살신하는 청렴문화, 신뢰받는 자치경찰

[인천자치경찰 청렴슬로건]



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 
Incheon Metropolitan Autonomous Police Commission

**□ 추진배경**

- 대전시 자살률은 전국 시도 중 4위, 특·광역시 중 1위를 기록, 지역 사회 내 안전망 대책 마련 시급
- 자살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간 업무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자살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함

**□ 사업개요**

- (일시·장소) '22. 12. 8.(목) 10:00, 대전경찰청 카르페디엠홀
- (참석자) 총 20명
  - 경 찰(10) : 자치경찰정책과(자경위), 시 경찰청·경찰서 생활질서계
  - 대전시 (2) : 정신건강팀장, 업무담당
  - 소 방 (2): 대전소방본부 구조팀장, 업무담당
  - 교육청 (1) : 청소년 위캔센터 상담교사
  - 정신건강복지센터 (5) : 자치구별 자살예방 업무담당

**○ (세부일정)**

시 간	내 용	비 고
10:00 ~ 10:10 (10분)	- 접수 및 등록	
10:10 ~ 10:15 (5분)	- 일정안내	
10:15 ~ 12:00 (1시간 45분)	- 2023년 기관별 자살관련 사업 소개 - 협조 요청 사항 공유 및 논의	

**□ 간담회 주요 내용**

- 기관별(경찰, 정신건강복지센터 등) 자살업무 담당자 전종 조치 필요
- 자살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요구
- 자살기도자에 대한 사후 관리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논의

## □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

-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지속 추진
    - 아동학대 예방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(22.12.15.)
    - '23년 자경위 주관 자치경찰 사무 6개 분야\* 관계기관 합동 교육 예정 (총 12회)
      - \* ①자살예방 ②CPTED(CPO) ③지역안전(CSO) ④교통 ⑤아동 학대 ⑥학교폭력
  - 정신응급관련 통합지원을 위한 (가칭)위기개입 통합지원센터 설립 추진
- ⇒ 자치경찰 사무 관계 기관 간 유기적 협업 체계구축으로 자치경찰의 전문성 및 문제 해결 능력 향상

## □ 간담회 사진 · 보도자료





## 3

**[충북] 권역별 찾아가는 정책 포럼 개최****□ 개 요**

○ 일시/장소

구 분	중 부 권	북 부 권	남 부 권
일 시	11. 22.(화) 14:00~16:30	12. 1.(목) 14:00~16:30	12. 8.(목) 15:00~17:30
장 소	청주시 S컨벤션 엘리오스홀	제천시 대원대학교 세미나실	영동군 유원대학교 심우관

○ 참 석 자 : 300여명(관련 전문가, 관계 공무원, 유관단체, 지역주민 등)

○ 주요내용

구 분	주 요 내 용
중부권	<b>&lt;실질적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&gt;</b> - 자치경찰조직의 이원화를 통한 자치경찰 사무의 개편 및 인사권 강화 -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국가재정분권 필요성과 방안
북부권	<b>&lt;지역맞춤형 치안정책 수립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방안 모색&gt;</b> - 치안수요를 반영한 자치경찰활동을 위해 주민참여 필요성 및 강화 방안 마련 - 치안정책 강화를 통한 유관기관 연계 방안
남부권	<b>&lt;농촌지역에 필요한 치안정책 관련 주민 의견 청취&gt;</b> - 제주사례 특강: 지역주민 자치경찰제도 학습 강화 - 농촌지역 도심 공동화에 치안공백 해소 방안 - 다문화가정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필요한 경찰서비스 논의

○ 행사사진

**□ 향후계획**

○ 충북형 자치경찰제도 발굴 및 권역별 정책 포럼 결과 전문가 자문

※ 충북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경·학·연 공동세미나

- 일시/장소 : '22. 12. 20.(화) 15:00~17:20 / 청주시 S컨벤션

- 참석대상 : 40여명(도내 경찰행정학과 교수 7명, 자치경찰발전연구원 1명, 경찰 공무원 3명, 지역대학생 17명, 위원회 12명 등)

○ 자치경찰제도 개선 방안 검토 및 정책 수립 반영

## 참 고

## 충북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경학연 공동세미나 개최

### □ 행사 개요

- 주 제 : ‘충북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제언’
- 일시/장소 : ‘22. 12. 20.(화) 15:00~17:20 / S컨벤션센터 희망의홀
- 주 최 :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
- 참석대상 : 40명 정도(교수7, 연구원1, 경찰3, 경찰행정학과학생 17, 위원회12)  
※ 발표자 : 12명(교수 7명, 연구원 1, 경찰서 과장 3명, 서원대 학생 1)
- 주요내용 : 충북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경학연 공동세미나

### □ 진행 순서

시간(140')		주요내용	세부사항
15:00~15:20	20'	개 회 식	<b>[개회식]</b> ▶국민의례, 내빈소개 ▶환영사(위원장) 및 축사(도지사, 청장) ※ 사진촬영 ▶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동영상 시청
15:20~17:20	120'	세 미 나	<b>[학계전문가: 교수&amp;연구원]</b> ▶ <b>김상해</b> 충청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 -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위한 지방자치경찰법 제정 ▶ <b>김영식</b>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(오효정 학생*) - 자치경찰 협력치안 활성화 방안(*협력치안 사례발표: 서원대 드림캅 활동) ▶ <b>김주한</b> 대원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과 학과장 - 여성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방안 ▶ <b>서준배</b>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 원장 행정학과 교수 - 시도별 자치경찰 정책분석 및 발전방안 ▶ <b>이규호</b> 유원대학교 경찰학부 학과장 - 지역주민 참여와 실질적 자치경찰제의 중심으로 개선방향 ▶ <b>이영우</b> 충청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 -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▶ <b>정상완</b> 강동대학교 경찰행정과 학과장 -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방안 ▶ <b>정재량</b> 충청대학교 경찰행정과 학과장 - 경학프로그램을 통한 자치경찰제 활성화 방안 (가나다순) <b>[현장전문가: 경찰]</b> ▶ <b>김경태</b> 청원서 교통과장 - 민관협력을 통한 교통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활동 강화 ▶ <b>신광교</b> 상당서 여성청소년과장 - 가해자 성행교정 지원을 통한 가정폭력 재범방지 ▶ <b>신재호</b> 상당서 생활안전과장 - 셉테드 사례분석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(가나다순)
17:20~		폐 회	▶폐회 및 만찬 간담회

## [제주] 「제주 자치경찰 지원·협력」을 위한 제주도-경찰청-경찰병원 업무협약 체결

### □ 추진 배경

- 그간 제주자치경찰단에서 경찰청에 수차례 경찰병원 진료 혜택을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못해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사기가 저하
- 제주 자치경찰 정책포럼('22.9.1.) 시 제주 위원장이 경찰청 자치경찰 협력정책관에게 개선을 건의, 경찰청장이 진료 혜택을 승인

#### ▶ 「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(경찰병원 훈령)」

§44(무료진료 및 감면) 무료 진료 및 진료비 감액대상범위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경찰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#### ▶ 경찰병원 진료 감면 기준(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기준)

- 재직 시 공상·사상을 불문하고 일체의 진료비 면제
- 재직 시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에 대하여도 50%의 진료비 감액 지원
- 퇴직 이후에도 50% 진료비 감액 지원(퇴직 이후 직계 존·비속 지원은 중단)

- 同 사항과 제주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상호 협력 등을 내용으로 제주도지사-경찰청장-경찰병원장 업무협약을 체결('22.12.13, 서면 체결)

### □ 업무협약 내용

-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이 경찰병원을 이용할 시,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진료비 감면을 지원
  - ※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, 이후 협약당사자의 이의가 없으면 3년씩 자동 연장
- 제주 이원화 자치경찰모델 시범운영 추진에 상호 긴밀히 협력
- 자치경찰제 성장·발전을 위한 상호 적극적인 협력 파트너십 구축

### □ 향후계획

- 자치경찰제 관련 경찰청과 지자체 간 업무협약은 최초, 同 협약을 계기로 제주자치경찰과 경찰청 간 발전적인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고, 제주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사업 등에 긴밀히 협조

